저출산 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김 경 신(전남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분배, 활용이 개인의 부와 사회적 지위는 물론 지역과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사람은 지식을 창출하는 핵심체로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확보가 일차적인 요건이며,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국가 사회의 명암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활성화는 각 국가의 초관심 분야가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기여한 핵심 요인은 빈약한 물적 자원을 메워 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국민 개개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인구'란 다른 여타의 국가에 비할 바 없는 매우 중요한 핵심동력이며 기초자원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제 사회 현상들은 국가의 정책적 기조를 설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2005년에는 출산율이 1.08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및 인구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당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다수의 정책들이 예방과 초기 대응의 시점을 찾지 못하고 실기함으로써 큰 후유증을 불러일으킨 것과 같이, 인구의 문제도 이미 80년대부터 경계와 관심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도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며, 동시에 시행착오 없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정책 청사진을 보면, 2020년까지 IMF 이전 수준인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1.6) 회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 면으로도 영유아 지원 10조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약 3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부정책을 비롯한 제반 대안들이 과연 출산율 상승과 사회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그 수치상의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줄 수 있을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 그동안 급격하게 변해 온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태도는 그 틀과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혁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치를 추정하고 여기에 정책적 비전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 역시 이러한 면에서의 깊은 우려를 함께 하면서, 저출산의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저출산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현실적이고 즉시적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단순히 학술적인 접근이 아닌 사유적이고 제언적인 형식의 글을 제시하고자 함에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Ⅱ. 선행연구: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효과

1. 저출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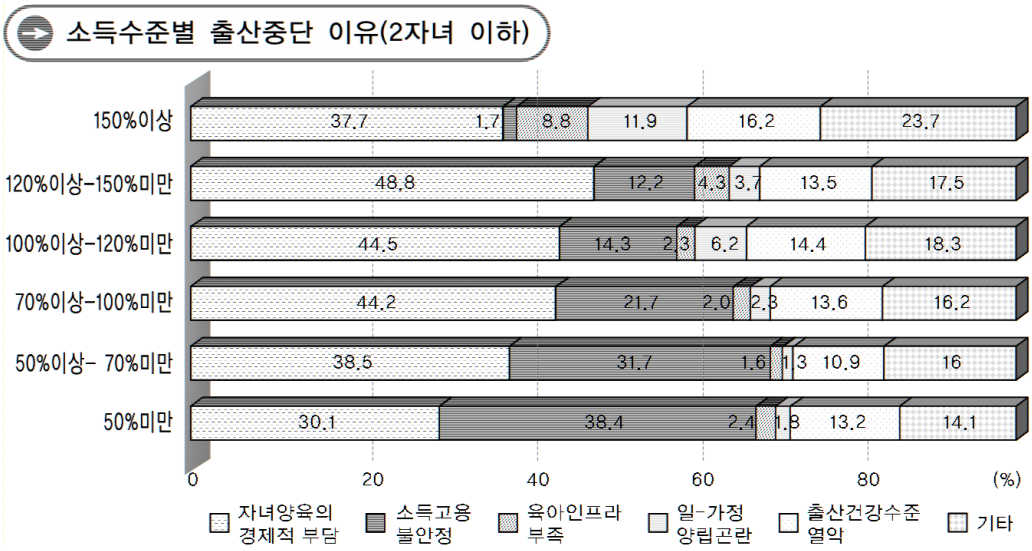
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는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불충분한 보육시설, 핵가족화 등을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국가가 여성인구의 사회진출과 가족의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인구정책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저출산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를 해야 할 경우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등 소자녀화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과 결혼의 매력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혼인율의 저하, 만혼경향, 초혼연령 상승, 결혼관의 변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김승권, 2002, 2003; 옥선화, 2003). 즉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되면서, 공동체적인 의무보다는 개인주의적인 행복 추구권에 가치를 두게 된 결과로서, 혼인이나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성별분업적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갈등이 저출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한편 저출산의 또 다른 중요 요인인 경제적인 요인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중단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05)가 실시한 가족실태 조사결과에서 출산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의 부담”이 44.4%로 나타난 결과가 이를 설명해 준다. 또한 최근 서울지역에서 한 자녀를 둔 327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한은주・박정윤, 2006)를 보면, 36.4%가 ‘부부 모두 둘째출산을 원함’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비슷하게 33.3%가 ‘부부 모두 둘째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한쪽만 추가 출산을 원하는 경우’가 26.9%로, 이들은 향후 둘째 자녀를 출산할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의사로만 본다면 이미 한 자녀를 가진 부부의 1/3 정도만이 둘째자녀를 나을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사교육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27.5%)을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취업유지에 따른 어려움’(12.82%), 3순위는 ‘자녀로 인한 개인적 시간, 활동제약(11.6%)’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즉 직접적인 경제 부담이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임과 동시에, ‘취업유지에 따른 어려움’의 경우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울 경우 가정보다는 일을 선택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숨어있다 하겠다. ‘자녀로 인한 개인적 시간, 활동제약’의 경우 부모됨의 즐거움 보다는 개인적인 즐거움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

향후 출산계획을 가진 부부들의 경우에도 그 이유로 '형제자매의 필요성'(46.2.%) '주변(양가 친척 등)의 권유와 압력'(14.4%)에 비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9.2%)를 선택한 비율이 낮은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조사(그림 1 참조)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이 소득 수준별 공히 출산 중단 이유로 경제적 부담, 소득불안정을 가장 많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료 : 보사연,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6.(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 출처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림 1> 소득수준별 출산 중단 이유

이 외 천혜정(2005)은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입장보다는 남녀 또는 부부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즉 우리 사회에서 특히 둘째 자녀는 부부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부부의 연령, 결혼연령,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상황, 여성의 취업, 이상적 자녀수, 자녀관, 출산정책 인식의 차이 등이다.

2. 저출산 정책의 효과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출산 행위에 미치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살펴 본 유계숙(2008)의 연구에서는 저출산정책 중 불임부부 지원, 모자 건강관리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비·교육비 지원 정책은 2007년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단일정책보다는 여러 정책을 중복 수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서지원(2006) 역시 OECD 국가의 저출산 정책분석 연구를 언급하면서, 저출산은 개별적인 단일 시책의 시행보다는 다양한 가족정책, 즉 산전후 휴가·육아휴직제의 내실화, 자발적인 시간제 고용 모델 개발, 영아 보육시설의 접근성 확보, 가족수당 지급 등의 복합적 시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2005)의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나 어린 시기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와 '아버지 육아휴직제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2%, 7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 적정기간으로 출산휴가 7일, 육아휴직 4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만이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주・박정윤(2006)의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중 자녀출산을 한번 이상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52.3%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을 꼽았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11.0%)이 지적되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0.1%, 보육시설 확충이 9.5%,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가 8.9%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것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고 있고, 이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가정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물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저출산 원인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저출산은 사회적 환경변화가 결혼양상을 변화시키고, 여성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가정 양립 문제와 연결된 경제적인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인 연구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집단의 의식은 실제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의식에 대한 추적, 혹은 그 결과를 반영한 정책들이 실제 행동적인 효과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이다.

Ⅲ. 저출산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관점과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총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재 각 단계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그것이 설정되는 근거와 사회적 맥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에 대한 관점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1. 저출산의 심각성이 제대로 인지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1983년에 출산율 2.1명으로 인구 대체수준에 들어선 이래로 1년만인 1984년에 1.76명으로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01년 1.30명, 2003년 1.19명, 2005년 1.08명으로 초저출산 상태로 진입하였다. 2007년 출산율은 1.26인데,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의하면 UN인구기금이 조사한 156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홍콩(0.9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한국의 출산율은 전세계 출산율 평균(2.54명)은 물론 선진국 평균(1.6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출산율 추이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

에 4,235만명, 2070년에 3,12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08%에서 2030년대 2.16%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세기 안에 국가 인구의 1/3 이상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므로 우리의 향후 인구 감소 추세는 **전쟁발발 수준**이다.[1]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위기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증가하면서 정책적으로 지나친 위기감 조성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지만, 적어도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어야 할 필요는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발생 이유 중의 하나로 초기의 사회적 대응 지연을 지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대응체제가 국민의 피부에까지 스며들 정도로 전면적이지 않다.

이것의 단적인 예로 행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서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저출산 대응이 일어난 것은 극히 최근인 2002년도부터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감소('96년 1.58명, '97년 1.54명, '98년 1.47명)한 이후에도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만 인식되어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우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에 이르자, 사회적 쇼크로 받아들여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시작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02년 국민연금 재정문제가 불거지고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발표되자 비로소 사회 이슈화 되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다.[2]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속 기구로 변경된 것은 정부의 통합적 저출산 정책 추진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정부 기구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예산지원, 부처간 협력과 통합적 정책 유도의 한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저출산 정책의 파급력을 실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면 최근 가시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구도-성인지, 성주류화 정책 등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오랜 기간의 투쟁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여성운동과 같은 치열한 주인의식을 가질 것인가?

2. 저출산 대응 정책은 복지정책인가?

사회적 문제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 특히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인간의 안전을 책임졌던 사적 제도들이 사라지면서 공적이고 형식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목적적 담론이 형성되고 이의 결과로서 행위가 일어났던 단순 사회와 비교하여,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이러한 목적적, 당위론적 개념을 상실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낱낱이 행위를 들여다 보고 거꾸로 원인을 유추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실기를 하기 쉽고 사회적 비용이 증폭된다.

사회복지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행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만족을 보장해주기 위한 산업사회의 새로운 선택이며 과학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필요를 사회적 제도로서 해결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

1) 한국전 당시에 북한은 인구의 28.4%인 272만여 명을 사망과 난민으로 잃었고, 남한은 160만여 명을 잃었다.

2) 그 이전인 2004년 2월 9일부터 설치, 운영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자문기구임.

개인이 기본적 역할을 포기한 결과론이 되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최저생활의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개념보다는 사회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원, 보호해주는 '사회안전(social security)'의 개념 즉 사회적 인프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별적 접근, 혹은 개별 수요자적 접근으로는 문제의 근원 치료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개별 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제도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소위 집단적 사회 현상 중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저소득층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복지시스템으로 이에 대응함은 사회적 인식의 오도로 인한 정책 체감도 감소를 유발한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회문제의 대응 방식이 그러하듯이, 습관적으로 사회 문제를 소득 대비 체제적 개념이며 동시에 사회서비스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구태의연한 사회구성원들의 반응, 즉 타자적 반응을 유발할 뿐이다. 즉 정책은 항상 '한번도 나에게 적용된 적이 없는' 혹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방관자적 입장이 그것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니면 오히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를 이루는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민희철 외, 2007)는 인식의 대전환을 유도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의 의도적 행위에 대한 체감도, 혹은 국민의 주체자로서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저출산 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책은 물론 정부의 의지이긴 하나 사회 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성원의 공감대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는 간혹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장과 일반 국민의 의식이 괴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사회는 일부의 리더들이 탁월한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문제발생을 예방해 나가면서 일반 국민을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념적 행위가 개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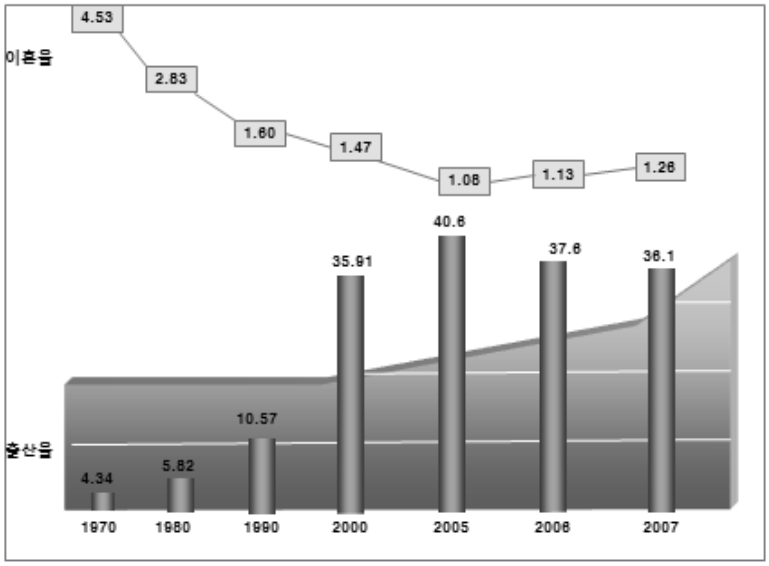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 정책은 목표가 혼재되어 진행되어 왔다. 사실 출산은 여성이 주도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을 제시하기는 하나 실제적이며 궁극적인 여성의 책임이며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출산 양육 정책은 여성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의 예속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은 사실상 여성의 신체적 굴레-임신, 출산을 어떻게 벗어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완벽한 여성의 독립은 개인화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사회적 순기능 개념과 갈등을 빚게 된다.

혹자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완벽한 대안과 보상이 가능할 때만이 저출산 문제가 극복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보육은 그러한 의미에서 순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보상이지 여성의 신체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보육은 여성의 전통적 의무를 사회적 제도로 대행해주려는 것이지 여성의 신체적 기여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것은 또한 사회적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공동체적 위무이다. 다만 그 의무는 여성만의 것이 아니고 남성 혹은 모든 공동체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출산을 유도하는 보육의 질을 어디까지 확보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보육 개념은 철저한 교육열에 의해 유도된 교육 개념과 혼동되어 있어 무한한 질적 수준을 요구한다.

4. 저출산 정책은 사회 제 현상과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선진국 복지의 특성 중 하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일대 일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문제는 중복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콜중독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폭력 등 행동 통제가 불가능해지거나 일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기혼자의 경우 가족해체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제별로 별적 접근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매우 커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원들이 야기하는 제 사회 현상을 유발하는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통합적 정책 개념이다. 저출산 현상은 개인복지 차원 혹은 개별 사회문제 차원에서 대응하면 해결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된다. 범국가적 사회 인프라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실현은 최근의 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제 사회 영역과 모두 연결되는 사회 인프라이며 동시에 기초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 문제와의 관련도 예외적일 수 없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바, 가족의 불안정성이 저출산과 맥을 같이 함을 자명한 사실이다. <그림 2>는 이혼율과 출산율이 1970년 이래로 반비례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 이후 설사 재혼을 한다 하여도 손상된 자아존중감등은 사회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는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시기적으로 출산율 변화는 이혼율에 후행할 것 같지만, 이혼 전 갈등 시기에 이미 출산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추이는 연도별로 괘를 같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변 요인들의 탐색과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림 2> 출산율과 이혼율의 변화 추이

또한 출산율은 산업적 특성, 국토의 균형발전과도 연관되어 있다. 즉 인구구조상 동질적 연령층 특히 결혼의 matching이 가능한 남녀 연령층이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 산업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표 1>은 전국 대도시의 여성독신가구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39세 독신여성 비율은 서울, 대전, 광주의 순으로 높고, 부산, 대구는 고연령층 여성 독신가구 비율이 비교적 높다. 울산과 인천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독신여성가구 비율이 낮은데도, 조혼인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역이 산업체가 많아 결혼 적령기 남성이 많이 몰리는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울산은 출생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결혼의 matching에 있어서 수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이 결혼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혼인 적령기 인구 구조를 독신가구 비율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제반 조건들이나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과 정책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 등도 이러한 인구 구조 형태와 연관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지역별・연령별 여성 독신가구비율 비교(2005, 2007)

	A/B(%)	A/C(%)	A/D(%)	B/D(%)	A/E(%)	조혼인율 (2007)	출산율 (2007)
서울	47.4	24.8	5.1	10.7	82.9	7.5	1.06
부산	25.7	15.0	2.8	11.0	82.8	6.0	1.02
인천	34.5	17.0	2.9	8.5	59.5	6.9	1.25
대구	24.9	17.6	3.2	10.4	77.5	5.9	1.13
대전	44.9	22.9	4.7	10.5	75.6	6.6	1.26
광주	36.9	19.8	3.8	10.2	70.4	6.3	1.27
울산	31.6	15.0	2.6	8.1	50.8	6.9	1.40

*A: 20~39세 여성독신가구 수, B: 총 여성독신가구 수, C: 총 독신가구 수, D: 총 일반가구 수, E : 20~39세 남성독신가구 수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응 노력은 기본은 좀더 거시적이고 통합적이 될 필요가 있다. 보육은 보육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각기 뿔뿔이 주무부처의 대응 논리에 의하여 시행된다면 보육시스템의 발전, 교육대안의 확충, 여성취업문제 해결 등 각각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출산율은 크게 제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 고용, 건강, 주거, 환경 등 기초적인 제반 사회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은 즉각적인 연계나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도 사회적 인프라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안정감을 높여 주어야 한다. 주택정책, 실업대책 등은 실제적으로도 저출산과 긴밀히 연결되고 빠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좀 더 큰 그림부터 점검되어야 한다.

5. 저출산 정책은 한국적 정서에 맞는 것인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는 일시적이며 일회적인 문제들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회적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적 패러다임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제 문제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사슬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슬의 구조를 차단하거나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문제는 점점 그 강도가 더해가며 다양화될 것이다. 근대화 초기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사회해체문제, 일탈문제가 발생한다. 소득분배, 노동문제, 농촌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하며 이는 즉각 인구문제, 환경문제, 가족해체 등과 연결되며 범죄, 비행 등 일탈적 사회병리와 연결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더욱더 개인주의화되며 긴장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전통으로부터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조망해볼 때, 유교에 근거한 사회윤리는 근대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위상을 재정립하지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근대화가 전통에 토대를 둔 내생적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구적 근대 양식의 급속한 이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김만흠, 1999). 따라서 이러한 혼재된 변화 양상은 그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부적응을 양산하였다.

한국사회는 1970년대 소위 억압적 군사정권의 대가로 고질적인 가난의 병폐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물질적인 풍요가 자율성을 통제하는 이러한 형식의 합리화는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삶의 저변에 흐르는 하나의 기류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때의 정부 주도적 경제정책은 행정관료와 기술관료 계층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증대시켰다. 자녀양육관에 주된 영향을 미쳐온 학벌주의, 계급주의, 치열한 입시제도 등은 이러한 흐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이러한 대중문화의 양적, 질적 확대는 가속화되어 대중문화가 과소비를 낳는 상업화의 도구로 더욱 부각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정치적 유화책으로 내놓은 통행금지해제, 교복자율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등 일련의 개방화 정책은 국민생활의 선택권을 증가시킨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음주문화의 확산, 강력범죄의 증가 등 부수적인 사회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신세대적 자유주의 사고의 등장으로 세대관계가 단절되고 가족윤리의 전수가 어려워진 계기도 바로 이러한 전략적 개방화 정책이 실시된 것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분야 위주의 산업구조 조정은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더욱 심화시켰고, 사회적 부의 불평등은 국민의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근면 성실이라는 윤리규범보다는 한탕주의, 기회주의 등 비합리적인 사고와 의식을 조장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제도적인 완충 장치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70년대 후반 소위 마이카 시대 이후에 출생한 현재의 출산주력세대(30세 전후)는 정보화세대이며 동시에 탈냉전시대의 차세대들이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종식으로 비롯되는 세계화의 기류는 각종 금기에 갇혀있던 다양한 욕구들을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한국적인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현상의 서구화는 이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완충 장치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며 동시에 정신적인 변화 속도가 지체됨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과 물질문화의 괴리, 세대간 격차 등이 개인과 가족과 사회 내의 상호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국가 주도의 근대화 과정과 급속한 상업화는 결국 자발적 공공영역의 형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본주의적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나 공동체 윤리는 보이지 못한 것이다. 가족주의마저도 시민사회의 공공성과는 결합하지 못한 채 배타적, 이기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의 젊은 세대는 너무 일찍 저출산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고유의 사회적 배경을 논의하지 않고 출산 정책, 개인의 책임, 여성과 환경의 변화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재 체제는 오히려 출산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최근 저출산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의 기초는 외국의 정책인 경우가 많으며 외국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공병호(2002)는 일본의 엔젤 플랜, 신엔젤 플랜과 같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한국 실정에 적절한 보육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출산 정책이 일본과 유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저출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 국가의 경제 규모, 정치형태, 사회복지체계 등이 다른 서구 선진국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체구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극약 처방의 성격으로 직접 지원을 실시한 저출산 정책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고액의 통합수당[3]을 감안한다면 우리 처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과연 얼마를 주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내기 위한 임계점인가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스웨덴 역시 경제적 지원에 민감하여, 불황기에는 여성의 실직 증가와 국가의 급여 감축 등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호황기에는 출산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스웨덴의 출산율 유지 요인은 양성평등에 기반하여 출산·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공보육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한 점도 중요하지만, 미혼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부모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지는 완벽한 복지 제도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일시적인 저출산대책이 아니라 통합적인 복지정책이 완벽하게 실시됨으로써 가변적이고 단편적인 변인이 발생하여도 이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들은 겉으로는 서구화된 듯 하나 내적으로 전통적 양심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의식과 행위의 심각한 괴리는 종종 정책입안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의 성장 역사가 그러하듯이 서구적인 정책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한국의 고유한 내적 질서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 임계점을 설정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보육의 질이 아무리 공고화된다 하여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조부모와 같은 대리모에게 더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의 설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Ⅳ. 대안적 결론: 저출산 정책의 실천적 함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일단 시작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 즉각적 영향을 실제 개개인이 빠른 시간 안에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과거의 역사적, 문화적 바탕을 검토하고,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식견과 추진력을

3) 출산 전 출산보너스(800유로), 소득 및 자산조사에 기초한 고정수당(3세까지 4,120유로), 보육지원 및 부모휴직지원(매월 340유로) 등

갖추어야 하는 중다역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출산 정책의 실천적 함의를 담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막연한 기대 불식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한 차경욱(2005)은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하고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67.5%가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 이상이라고 답하여 출산장려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관련 기관과 정책입안자들이 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외부환경 및 조건을 개선해 주면 추가적인 출산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는 최근 시작한 일은 아니나,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의 고강도 정책으로 실제 행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제는 마지노선까지의 의식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의 회귀는 한계가 있으므로 막연히 '사회적 공감대'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의 대안도 추상적인 선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국가의 정책적 위기에서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면서 한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효의식'에 기대한 노인부양문제 해결이 그러하듯이, 이제는 국민의 자생적 해결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국가의 정책적 대안을 전제로 국민적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양적 치유보다는 국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려는 의지와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자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나친 국민에 대한 낙관일 수도 있겠다.

따라서 정책은 개인 귀책론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정책들은 출산기피를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귀책시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개인 귀책 혹은 개인 비난은 사회적 염오를 가중시킬 뿐이다. 이러한 관점이 일시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은 개인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윤리와 책임이라는 사회적 명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이 저출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회적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맹목적인 타율적 기준에 의하여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사회적 보상에 의해 사회적 행위의 선택이 일어난다든지, 삶의 조건을 물질적 우위로 판단하고 이를 다른 모든 가치 판단의 잣대로 삼는다든지, 개인의 행복에 대한 판단을 주관적으로 행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또한 미래세대의 삶의 조건을 전수해주어야 할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앞서 저출산 정책의 조직체계 상의 아쉬움을 언급했지만 부처간 사업 및 예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금의 백화점식 정책 대안들은 규모의 경제학으로 무장된 다른 정책과의 예산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가시성과 정치적 대중성이 높은 정책 부문에 비해 힘을 결집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정책부서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역시 어느 면에서는 추진 체계상 장애가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확신이 매우 어려운 부문이기는 하나, 정책 추진의 체계와 선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해 당사자간 조정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점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저출산 정책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장애라 할 것이다.

사실 저출산 정책은 보육정책 등과 연계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육의 예산 투여로 인하여 나머지 사업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대상의 사업마저 지자체들에 의해 저출산정책 사업으로 포장되면서[4] 오히려 순수한 저출산 정책의 순위나 비중이 모호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만 5세아 무상보육의 실시', '취약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시설의 책임강조' 등을 통하여 사회의 보육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기혼부부들로 하여금 자녀출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드웨어가 아닌 체감도 높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수당, 직장탁아)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기혼여성이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만 있지 그 실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정책의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재원조달의 가능성이나 실현성은 차치하고라도 정책의 쏠림이 있다는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의 사후대응적 논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대로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복지제도의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사회적 인프라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국민 누구나 당면한 과제이며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므로, 양극화 해소나 단순한 '투입과 산출'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여진다.

3. 전문조직, 전문가 양성

정책의 입안과 운용은 정부 부처의 책임과 소관이라 하나 최근의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행 및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저출산 정책은 그 당위성이나 시급성 혹은 정책적 전문성이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문인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공고화된 협력 조직 혹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사회변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조망 등이 전제되어 장단기 계획들이 보다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예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복잡한 다중 변수들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으

4) 최근 인구정책경진대회 사업 테마들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들의 저출산 사업 중에서 미혼자국제결혼지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다문화가정교육상담사업, 외극인가정 돌보미사업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므로, 단순한 정책수행자의 판단보다는 전담기구들의 전문가들을 통한 체계적인 추적 작업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섬세한 소규모 사업들

최근 들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별 저출산 정책들을 보면 직접적 지원 형식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옹기종기 감동을 주는 경우를 보게 된다. 큰 범위의 정책들이 앞서 길을 터가면서 섬세한 소규모 사업들이 뒤따라갈 때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5]. 특히 여성정책, 가족정책, 교육정책 등이 각각 연결되어 진행되어 가는 중에 특히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 일종의 tip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 출산한 취업여성 고용율에 따라 기업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연금 혹은 조세, 기타 기업부담금 감면 등의 탄력적 지원을 행한다.
- 부부가 아동양육에 공동 참여할 경우(남성양육휴가 등을 신청 시) 아동 성장기에 보육기관 및 공공 교육시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 출산한 여성의 재고용센터 운영이나 창업지원을 위한 별도의 펀드를 운영하되, 이러한 펀드는 소수자녀가정의 투자나 사교육 수요자의 직・간접세 등을 활용한다.

그리고 출산 정책 관련 사업들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특히 중앙정부의 사업지원 의지가 아무리 강하여도 matching fund나 조직 확대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시책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겠다. 특히 수혜자는 공통적으로 우리 국민이며 동시에 지역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5. 사회문화운동으로 승화

저출산의 정책적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한정된 예산으로 혹은 물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출산은 아직 정서적으로는 개인의 희망과 책임의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의식 전환 운동이 필요하다. 정책부서의 홍보나 유도 사업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문화운동이 그것이다. 여성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 사회 각층에서 사회적 제약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행위가 일어나듯이, 출산문화운동도 우리 스스로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났을 때 비로소 실천적 empowerment가 형성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운동이란 바람직한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새로운 긍정적 준거(positive reference)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의식을 저해하는 도구 주의적 문화, 이기주의・경쟁주의,

---

5) 최근 인구정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진군의 경우 총 20개 저출산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성장주의・물질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다. 가치혼란이나 가치부재를 극복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윤리의 창출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평등과 참여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의 정착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발적 행위, 사회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6. 사회구조의 전환에 대응

저출산사회를 고출산사회로 전환하기에는 이미 사회 구조의 고착화나 의식 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어 이루기 어려우므로, 한국 사회의 노동 구조나 경제 정책을 저출산 사회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데 무게 중심을 더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국가 비용으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없는 한국사회의 입장을 수렴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사회구조의 대전환에 대한 새로운 시도요 제언으로 귀기울여볼 필요도 있겠다.

[참고문헌]

공병호(2002). 일본의 저출산율에 대한 정책고찰. 한국여성교양학회지, 9, pp. 35-54.

김승권(2003).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세미나집, pp. 49-73.

김승권 외(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정책보고서 2002-4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희철 외(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서지원(2006).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방향. 한국가족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여성가족부(2005). 2005 전국가족실태조사보고서.

옥선화(2003). 20・30대 기혼남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지각수준과 저출산 대책.「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세미나집, pp. 27-46.

유계숙(2008).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 관계학회 포스터 발표 논문.

이삼식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차경욱(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천혜정(200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4.

한은주・박정윤(2006).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권 11호, 1-12.